

북한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변화 전망

김일기 책임연구위원
ikkim@inss.re.kr

채재병 수석연구위원
chaejb@inss.re.kr

I. 문제 제기

II.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변천 과정

III. 제8차 노동당 대회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IV. 대남혁명전략의 변화 전망

국문 초록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대남혁명전략과 관련된 문구에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 당규약」은 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하였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대한 문구 변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는 사실상 노동당 규약에서 남조선혁명론이 소멸하였으며, 법·제도적으로 ‘투 코리아(Two-Korea)’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는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문구를 순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북한의 명분(명목적 목적)과 실제(실질적 목적) 중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혁명전략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 기준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마도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며, 대남혁명전략은 미국과 우리를 더 이상 ‘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의 평화공존이 정착되어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할 때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혁명전략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남북 평화공존과 북미 수교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북한이 우리와 미국을 더 이상 ‘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어: 대남혁명전략,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북한, 노동당 규약, 노동당 대회

목차

I. 문제 제기

II.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변천 과정

1.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적화통일 전략(1945~1953)
2.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전략(1953~1969)
3.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1970~2009)
4.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전략(2010~2020)

III. 제8차 노동당 대회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1. 대남혁명전략에 대한 시각
2. 대남혁명전략에 대한 평가

IV. 대남혁명전략의 변화 전망

1. 「노동당 규약」의 대남혁명전략 폐기는 지난(至難)한 과정
 2. 남북연합 단계에서 대남혁명전략과 적화통일 문구 폐기
-

I. 문제 제기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북미 관계는 긴장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향한 세기적 대전환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교착국면에 머물러 있음
 - 남북·북미 관계의 진전은 향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성숙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를 추구하면서 대남혁명전략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이번 제8차 당대회의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대남혁명전략의 문구를 변경
 -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우리 사회를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대남혁명전략을 지속
- 북한의 대남전략은 대남혁명전략과 조국통일전략으로 구성
 - 김정일은 1976년 초에 열린 대남공작부문 간부회의에서 “남조선혁명전략이 남조선에만 국한된 전략이라면, 조국통일전략은 남북한을 포괄하는 전 한반도의 전 민족적 문제”라고 주장¹⁾
-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우리 사회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변화
 - 그러나, ‘남조선혁명’을 통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기본노선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넘어 김정은 시대에도 변함없이 지속

1) 신평길 편저, 『김정일과 대남공작』, 제1권 (서울: 북한연구소, 1996), pp. 163-164.

-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는 우리의 대북·통일정책 수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남혁명전략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
 - 분단 이후 남북관계 70여 년의 역사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가 어렵다는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우리 사회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전술적 차원에서 조금씩 변화하였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
 - 따라서 ‘남조선혁명’을 통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시점이 도래한다면 대남혁명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
- 이 전략보고는 북한 제8차 당대회의 「개정 당규약」에 나타난 대남혁명전략 문구의 의미를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 대남혁명전략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정 당규약」의 대남혁명전략 문구 변화를 평가한 후 향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

II.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변천 과정

-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해방 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통해 제8차 당대회 이전까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으로 정립
 - 몇 차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혁명’과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대남혁명전략의 목표는 변함없이 지속
 -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시대적 변천 과정에 따라 주요 목표와 의도를 중심으로 제시

1.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적화통일 전략(1945~1953)

- 북한은 해방 직후 개최된 조선공산당 북부조선 책임자 및 열성자회의(1945.10.10~13)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설치와 함께 ‘혁명적 민주기지론’을 제시

※ 북한은 민주기지에 대해 “‘민주기지’는 혁명이 진행되는 나라에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혁명이 승리하고 개혁이 실시되어 앞으로 전국적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되는 지역을 말한다. 공화국 북반부는 전국적 범위의 반제반봉건민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민주기지이다”라고 정의²⁾

- ‘혁명적 민주기지론’은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동시에 추진시킬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북한지역에서 먼저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을 기반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³⁾

※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대처하여 이미 해방된 북조선에서 혁명을 적극 밀고 나가며 북조선에 튼튼한 혁명기지를 창설하여야만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⁴⁾

- ‘혁명적 민주기지론’은 민주기지의 창건과 민주기지의 강화라는 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 ※ 민주기지의 창건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설치를 의미하며, 민주기지의 강화는 임시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어 민주개혁이 완료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북한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강력한 거점’이 된 이후를 의미⁵⁾

- ‘혁명적 민주기지론’은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적 혁명역량과 그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남한지역에 혁명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구상

-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 건설을 위해 ‘4대 군사노선’ 즉,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북한을 남한혁명의 전진 기지로 만드는 것을 의미

- 북한이 ‘혁명적 민주기지론’을 주장한 배경은 해방 직후 모든 면에서 북한지역이 남한지역에 비해 우세한 상황이며, 이러한 유리한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⁶⁾

- 북한은 ‘통일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먼저 대내적으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노동당 창당(1945.10), 조선인민군 창설(194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48.9) 수립으로 나아감

2)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편,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3)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456.

4)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86.

5)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립』 (서울: 돌베개, 2001), pp. 29-30.

6)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22.

-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따라 북한 내부의 혁명역량을 강화한 이후 무력 통일을 시도
 - 김일성은 북한 정권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을 발표,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미·소 군대의 동시 철수를 주장
 - 북한은 ‘국토완정론’을 통일의 화두로 삼았으며, 국토완정론에 따라 1950년 6월 25일 ‘민족 해방전쟁’을 명분 삼아 전면적인 남침 감행
 - ※ ‘국토완정론’은 북한지역의 혁명기지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판단하에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통한 통일 추구를 의미

2.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전략(1953~1969)

-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적화통일 노선에 따라 6.25 전쟁을 일으켰으나, 남침에 실패한 후 전후 복구사업에 치중
 - 북한은 1958년에 이르러 전후 복구사업과 사회주의 개조를 통해 대내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었다는 판단하에 대남혁명전략으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추진
-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노선은 남한 사회의 성격이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라는 인식에 기반
 - 6.25 전쟁 이후 미군의 남한 주둔에 따라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자본주의 요소보다 봉건적 잔재가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 반(半)봉건사회로 평가⁷⁾
-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남조선혁명론과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주장하기 시작
 - 남조선혁명론과 3대 혁명역량 강화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1964.2.27)에서 채택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김일성의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원 연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
 - ※ ‘3대 혁명역량 강화’는 북한 자체의 혁명기지역량, 남한의 혁명역량, 국제적 혁명지원역량 강화를 의미
 - ‘혁명적 민주기지론’은 북한에 민주기지를 먼저 건설하고 이를 통해 남한에 혁명을 확산하는 방법

7)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제』 (서울: 기파랑, 2013), p. 127.

- 반면, ‘남조선혁명론’은 남한의 혁명역량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여 남한 내부의 혁명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역량과의 협작을 통해 통일을 실현한다는 전략
- ※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 두 지역에서 각각 현실적 조건에 맞는 혁명과업을 제기하고 그에 상응한 투쟁 방법으로 혁명을 수행하여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한다는 내용⁸⁾

3.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1970~2009)

- 김일성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당규약 전문에 명시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은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을 의미
 - 이 노선은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혁명을 진행한다는 ‘단계적 혁명론’⁹⁾
 - ※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은 그 자체로 완성되는 혁명이 아니라 사회주의로의 이행조건을 마련하는 혁명¹⁰⁾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자본주의적이며 봉건적인 경제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의미
 - 대남혁명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는 민족해방의 과제와 민주개혁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의미¹¹⁾
 - 구체적으로 미군 철수를 통해 민족해방을 달성하고 미국에 예속된 남한 정부를 타도하여 민주정권을 세운 이후 토지개혁과 부의 재분배 등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

8)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p. 18.

9)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p. 457.

10)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pp. 44-48.

11)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p. 32.

- 지역혁명론의 성격을 띠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은 196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1965년 4월 14일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아리 아르함 사회과학원 연설을 통해 공개→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재확인→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5차 대회에서 노동당의 당면투쟁 목표의 하나로 규정
 - 이는 남한의 혁명역량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남한의 혁명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역량과의 합작을 통해 통일이 실현된다는 논리에 기반
 - 북한이 지역혁명론을 주장한 배경은 분단의 장기화와 남북한의 체제 고착화에 따라 무력 적화통일이 사실상 어렵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전략(2010~2020)

-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대남혁명전략으로 명시했으며, 7차 당대회를 지나 8차 당대회 이전까지 지속
 - 북한은 당규약 개정을 통해 대남혁명의 성격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으로 수정
- 북한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¹²⁾
 - 첫째, 용어 혼란 전술로서 북한은 과거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또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내용으로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의미
 - ※ 북한이 ‘인민’을 삭제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추구했던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다만 전술적으로 ‘인민’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2)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pp. 168-171.

- 둘째, 북한은 대남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소수의 핵심역량만이 아닌 더 많은 동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혁명적 용어이며 남한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인민’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평가
 - ※ 북한이 대남선전과 심리전에서 ‘혁명’이라는 용어 대신 ‘변혁’ 또는 ‘변혁운동’을 사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이 노동당의 당면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과 최종목적인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대남혁명’과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의미¹³⁾
 - 이의 논리적 구조는 ① 당면목표: 사회주의 강성국가(북)·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남) → ② 최종목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반도 적화통일)로 구성
-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우리 사회의 성격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
 -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¹⁴⁾고 선전
 - 우리 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통치 정권(또는 친미파쇼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인식 속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민족해방’과 우리 내부의 파쇼적 반동 세력에 대한 ‘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대남혁명전략의 목표로 추구
 - 북한은 이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대남혁명 또는 남조선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음¹⁵⁾
 - 따라서, 북한이 사용하는 민족해방은 “미제축출=주한미군철수: 자주화”를 뜻하며, 민주주의혁명은 “남한정권 타도 후 인민정권 수립: 민주화”를 의미¹⁶⁾

13) 김일기, “북한의 정보기구,” 한국국가정보학회 엮음,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3), p. 458.

14)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211.

15)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p. 38.

16) 강석승,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남전략.”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 현황과 전망』 (2012), p. 5.

Ⅲ. 제8차 노동당 대회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1. 대남혁명전략에 대한 시각

-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남혁명전략과 관련된 문구를 변경
 -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
 - 노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에서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변경

〈북한의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 *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2021년 당규약 서문)
- *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2012 2016년 당규약 서문)
- *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2010년 당규약 서문)
- *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1980년 당규약 서문)

-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대한 문구 변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존재
- 첫 번째 해석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삭제된 것에 주목하여 사실상 노동당 규약에서 남조선혁명론이 소멸된 것으로 평가¹⁷⁾
 - 노동당 규약의 변화는 △대남전략(남조선혁명론 → 일국(북한)혁명론) △통일담론(우리(조선)민족제일주의 →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변화를 의미¹⁸⁾
 - ※ 기존 당 규약에서 통일전선과 관련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 문구에서 대남 인민과의 연대를 의미하는 ‘우리민족끼리’ 표현 삭제
 - 북한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를 당 규약에서 삭제한 것은 법·제도적으로 ‘투 코리아(Two-Korea)’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¹⁹⁾
 - ※ 북한이 통일에 대해 “잘못하면 남한에 흡수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당규약 개정으로 해석
- 두 번째 해석은 북한이 남조선혁명을 포기했다는 분석은 성급한 평가라고 주장하면서 변화가 없다고 주장
 -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풀어쓴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²⁰⁾
 - ※ ‘사회의 자주적 발전’은 한국이 미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민족해방혁명을 의미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한국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 개정 당규약 서문의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중국적으로 청산”한다는 문구가 남한에서의 민족해방혁명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

17) “이종석 전 장관 북한, 통일 지향 안 해…남조선혁명도 포기,” 『연합뉴스』, 2021년 6월 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2134300504>> (검색일: 2021.6.3).

18) “이종석 “북 당규약 개정으로 ‘김정은 당’ 완성’…대일 관계는?,” 『한겨레신문』, 2021.6.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97736.html>> (검색일: 2021.6.3).

19) “정세현 “최근 北동향 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쉽지 않을 것,” 『연합뉴스』, 2021년 6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127100504>> (검색일: 2021.6.5).

20) 오경섭, “개정 조선노동당규약의 핵심 쟁점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16 (2021.6.9), pp. 1-2.

- 최종목적의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주목하면서, 민족해방민주주의를 대신하는 문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유지되는 증거라고 주장
- ※ 북한이 우리 국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혁명’, 즉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은 삭제하고 대체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최종목적인 공산주의사회 건설은 당당히 밝히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분석²¹⁾

2. 대남혁명전략에 대한 평가

-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의 대남혁명전략 문구 변경에 대한 해석은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의 직면하고 있는 ‘명분(상징)과 실제(현실)’의 괴리에 대한 고민이 노동당 규약의 대남혁명전략 문구 변경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
 - 김정은 시대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은 명목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을 지속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체제경쟁(김일성) → 체제생존(김정일) → 체제정상화(김정은)로 변화²²⁾
 - 북한의 명분(명목적 목적)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노동당 규약의 변화는 실질적 의미 없는 문구 변화에 그침
 - 반면, 북한의 실제(실질적 목적)에 주목할 경우에는 당 규약의 문구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대남혁명전략의 포기를 향하는 과정으로 인식
 - ※ 대남혁명전략 포기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실질적’ 또는 ‘사실상’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이는 당규약에서 대남혁명전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음을 의미
- 노동당 규약의 대남혁명전략은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유훈’을 계승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존립 기반으로 작용
 -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혁명전략의 포기 또는 삭제는 남북·북미 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

21) “개정된 北 노동당 규약 北 적화통일 노선 폐지?... “용어만 바꾼 것” 『Daily 월간조선』 (2021년 8월),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108100040>> (검색일: 2021.10.9).

22) 김일기·이수석,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 『INSS 전략보고』, No. 103 (2020), pp. 7-8.

- 노동당 규약이 북한에서 가지는 상징성과 명분을 고려할 때 제8차 당대회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문구 변경을 대남혁명전략의 포기라고 보는 것은 무리
 - 대남혁명전략의 본질적 변화 없이 ‘민족해방→자주적, 민주주의혁명→민주주의적인 발전’ 등으로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도 ‘대남혁명전략 불변’ 입장임을 강조하여, 우리 사회 일각의 ‘남한혁명 통일론 폐기’ 주장을 반박²³⁾
- 북한이 개정 당규약 서문에서 대남혁명전략 분야를 수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 가능
 - 첫째, 북한이 통일문제를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연계하여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인식하고 장기적 차원의 통일전략 기초를 설정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 ※ 개정 당규약에서 ‘우리민족끼리’ 등 민족성 논의가 사라지면서, ‘우리국가제일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대 국가’ 대결 구도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통일보다 분단관리, 독자생존과 공존 모색, 대북 지원보다 자력부강 등을 강조하면서 ‘국가성’ 강화를 통한 남북공존을 모색
 - ※ △우리국가제일주의 담론 △‘민족’ 대신 ‘국가’와 ‘애국’ △표준시 변경(환원) △고위급 회담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호칭 △남북관계 관련 ‘외무성’ 성명 등장 △헌법 서문에서 ‘조국’을 ‘국가’로 변경 등²⁴⁾
 - 둘째, 북한이 합법 정치 공간을 활용한 선거 혁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남조선혁명론을 확장하려는 의도로써,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한 집권도 포함²⁵⁾
 - ※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명목적으로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대남혁명전략의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 발생
 - 결국,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의 변경은 시대적 상황과 한반도 정세변화 등을 반영하여 단기적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통일문제를 중장기적 목표로 전환한 대남혁명전략의 전술적 변화로 해석 가능

23)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킨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도 일관한 노선과 정책,” 『조선신보』, 2021년 6월 7일.

24) 김일기·이수석,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 p. 8.

25) 오경섭, “개정 조선노동당규약의 핵심 쟁점 분석” pp. 2-3.

IV. 대남혁명전략의 변화 전망

1. 「노동당 규약」의 대남혁명전략 폐기는 지난(至難)한 과정

-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혁명전략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 기준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에 의미
 - 북한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당규약은 노동당의 당면목적으로 ‘사회주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최종목적으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제시
 - 북한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은 우리 사회가 ‘미국의 식민지’이며, 우리 정부의 성격이 ‘미제의 식민지 대리통치 정권(또는 친미파쇼 정권)’이라는 인식에 기반
 - 이는 한반도에서 ‘미제축출=주한미군철수’와 ‘남한정권 타도 후 인민정권 수립’이라는 대남혁명전략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
-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그동안 노동당의 존립 근거임과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와 일인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
 - 북한에 있어 미국과 남한이라는 ‘적’의 존재는 인민들의 궁핍한 생활과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로 활용
 - 북한은 경제위기의 근원은 미제와 남한 파쇼정권의 ‘대조선 고립 압살 책동’에 있으며, 이들을 타도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
 - 대남혁명전략의 폐기는 북한의 의미로는 미제와 남한 파쇼정권이 더 이상 ‘적’이 아님을 의미하며, 사회주의 체제와 일인지배체제를 정당화해주던 기반이 사라짐을 의미
 - 따라서, 대남혁명전략은 미국과 우리를 더 이상 ‘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

2. 남북연합 단계에서 대남혁명전략과 적화통일 문구 폐기

- 남북·북미 관계가 진전되어 남북 평화공존과 북미 수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변화될 가능성 증가
 -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사회의 ‘미국 식민지’ 근거가 소멸
 - 주한 미군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그 역할이 ‘동북아의 균형자 또는 안정자 역할’로 변화하면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정당성을 상실
 - ‘남한정권 타도 후 인민정권 수립’을 의미하는 ‘민주주의혁명’ 역시 남북이 평화공존을 거쳐 항구적 평화정착 상태에 도달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움
 - 남북의 평화공존은 서로의 제도에 대한 인정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
-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의 평화공존이 정착되어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할 때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혁명전략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
 - ※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 등 3단계로 규정
 - 노동당 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의미하는 문구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 등 대남혁명전략과 관련된 규정들은 삭제할 가능성
 - 그러나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한다”라는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존속할 가능성 높음
 - ※ 김정은에게 있어 한반도 통일은 선대의 유업임과 동시에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기제로 작용
-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혁명전략과 적화통일 문구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공동의 ‘통일방안’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
 - 남북공동의 통일방안은 우리의 헌법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공통으로 삽입될 것이며,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적화통일 문구 폐기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문헌

- 강석승,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남전략.”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현황과 전망』 (2012).
-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서울: 기파랑, 2013.
- 김일기, “북한의 정보기구,” 한국국가정보학회 엮음,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3.
- 김일기·이수석,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 『INSS 전략보고』, No. 103 (2020).
-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편,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 신평길 편저, 『김정일과 대남공작』, 제1권, 서울: 북한연구소, 1996.
-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서울: 돌베개, 2001.
- 오경섭, “개정 조선노동당규약의 핵심 쟁점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16 (2021.6.9).
-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개정된 北 노동당 규약 北 적화통일 노선 폐지?... “용어만 바꾼 것” 『Daily 월간조선』 (2021년 8월),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108100040>> (검색일: 2021.10.9).
- “이종석 전 장관 북한, 통일 지향 안 해...남조선혁명도 포기,” 『연합뉴스』, 2021년 6월 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2134300504>> (검색일: 2021.6.3).
- “이종석 “북 당규약 개정으로 ‘김정은 당’ 완성”...대일 관계는?,” 『한겨레신문』, 2021.6.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97736.html>> (검색일: 2021.6.3).
-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킨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도 일관한 노선과 정책,” 『조선신보』, 2021년 6월 7일.
- “정세현 “최근 北동향 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쉽지 않을 것”, 『연합뉴스』, 2021년 6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127100504>> (검색일: 2021.6.5).

Abstract

North Korea's "Revised Party Rules" and Prospects of Changes in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l-Gi, Kim

Jae-Byung, Cha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During the 8th Party Conve, North Korea revised the Workers' Party of Korea rules and changed the phrases related to the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The revised party rules changed the purpos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from "performing the task of national liberation and democratic revolution on a national scale" to "ealizing the independent and democratic development of society on a national scale." There are two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the change in the wordings of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 line of arguments considers that the Workers' Party of Korea rules no longer seek the theory of the revolution in South Korea, and the revised rules formalize that "Two-Korea" legally and institutionally. Another interpretation argues that "realizing the independent and democratic development of society" is only a purifying phrase of "national liberation-democratic revolution." The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may depend

Abstract

on whether we emphasize North Korea's rationale(nominal purpose) or practice (substantive purpose). If the Workers' Party of Korea rules changes their revolutionary strategy for South Korea, it should delete content related to the "National Liberation and Democratic Revolution." Moreover, that process will probably be a tedious one. The revolutionary strategy for South Korea is likely to continue until it reaches a stage where it can no longer defin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s 'enemies' at this stage. We expect North Korea to discard it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n the Workers' Party of Korea rules when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es a peace regime and settle down peaceful coexistence, leading to the stage of inter-Korean union. At this stage, the two Koreas are likely to make peaceful coexistence. Also, North Korea is likely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the United States, implying that North Korea will no longer defin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enemies" anymore.

Keywords: Revolutionary Strategy for South Korea, National liberation-democratic revolution, North Korea, Workers' Party of Korea Rules, Workers' Party of Korea Congress

INSS

전략보고

December 2021. No.154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